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03: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관 :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정진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주최 :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정진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여성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03: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관 :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정진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주최 :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정진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순서

시간		내용
15:00-15:20	20분	국민의례 및 개회사 격려사, 인사말 내빈 소개 및 참석자 소개
15:20-15:40	20분	주제발표 성기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40-16:40	60분	사회 한만중 (교육희망네트워크, 개포중학교 교사) 토론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이 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서리)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 담당관)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16:40-17:00	20분	종합토론
17:00	-	폐회사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태년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유난히도 교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선거였습니다. 과거 선거의 단골메뉴였던 대형국책사업 공약이 사라지고, 민생과 연결된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국가부담 등 예전같았으면 말만으로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인 공약들이 제시됐습니다. 5년전 이명박정권이 내세웠던 대한민국 747 공약이나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수위가 출범하고, 새 정권 출범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공개적인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고교무상교육,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등은 각기 연간 수조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것인지, 개정을 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 등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의과정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혼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여야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진 영어몰입교육과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부작용만 발생시켰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일선 교육청과 교사들과 무리하게 갈등을 빚으며,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이끌었던 전철을 밟아서도 안됩니다.

금일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한 단체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원정책에서부터 교육정책, 비정규직, 교육자치, 교육비, 교육복지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대립과 갈등으로 황폐화되지 않기를 희망해봅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4일

교육과학위원회 김 태 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진후입니다.

새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 하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서로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에 뿌리는 둔 채 일부 교육복지 공약만 추가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이기에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얼마 후에는 민낯을 드러내겠지요. 현재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수용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른바 선거 패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보수정권은 언제나 처음과 달리 결국 자신의 지지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회귀해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의 모호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교육복지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그는 공약에서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우리 교육의 암적인 존재와 같았던 것들을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야당 및 진보진영이 새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추동해나가지 않으면 현장의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실현불가능한 의제는 아니었는지, 국민이 느끼는 고통스런 현실과 괴리돼 있었던 건 아닌지, 구체적인 실행경로가 부재했던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최소한 향후 5년을 내다보고 교육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 교육동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열심히 투쟁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4일

국회의원 정 진 후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더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꿈꾸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교육은 크게, 올바른 시민양성을 위한 인성·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교육,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전문역량을 키우는 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입, 대입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초중등교육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고입, 대입을 위한 선행학습 등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학문적 소양을 키우고 연구를 해야 할 고등교육은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전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초중등교육의 권위와 역할이 소외되어, 전인교육·인성교육이라는 본래 공교육의 교육목적이 상실되고, 우리 아이들은 더욱 학교폭력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을 바로잡고, 취업난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대학이 연구와 교육역량을 회복하려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미래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로드맵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과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공교육을 받아, 건강한 인성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과열된 입시경쟁을 과감히 중단시켜야 합니다.

MB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도입한 입학사정관제, 특목고, 자사고 위주 고교정책 모두 그 취지만큼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대입/고입제도의 패착이 반복된다면, 우리 공교육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육 정책에 관해, 전문성-현장경험-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교원, 교직원, 학부모회, 대학교수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의 연구·교육역량을 회복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과 국회 교과위는 여러분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른 길로
향하도록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교과위원장으로서 교육양극화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선진
화된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신 김태년, 정진후 의원님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그리고 각
유관단체의 후원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4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 학 용



제 1 부 : 주제발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전망과 과제

발제: 성기선(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제 2 부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공약) 분석과 대응 : 초중등을 중심으로

이 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서리) 15

학부모 눈으로 본 새 정부 교육정책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20

대학 등록금 정책과 사학재정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3

고등교육 문제와 반값등록금

임재홍(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6

교육자치의 과제와 전망

김현국(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 담당관) 30

공교육정상화와 비정규직 문제

이태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32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전망과 과제

발제: 성기선(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몇 년전 한 일간지의 칼럼에서 본 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연구를 통해 얻은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서울 강남의 중산층 아파트에 사는 선배 한분의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연이다. 이곳 중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하던 딸아이가 강북의 외국어고등학교에 무난히 합격했다. 딸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딸이 외고에 진학한 지 1년여 뒤, 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매사 의욕을 상실해 갔다. 평소 딸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 왔다고 자부해 온 아빠는 고심 끝에 딸을 직장 근처의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저녁을 같이하며 “무슨 고민이 있어 그러느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말해 보라”고 했다. 한참을 만성이던 딸이 어렵사리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전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중학교 때에는 조금만 해도 상위권에 들었는데 외고에 와서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중산을 못 넘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 못살겠어요.” “그렇지 않다. 외고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에서 너처럼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성적이 금세 떨어지는 거야. 물론 매일 놀다시피 하면서도 시험 볼 때마다 일등을 맡아 놓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네 페이스대로만 하면 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중략)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아이들이 얼굴과 몸매도 예쁘고 남자친구도 많은 것은 정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중략)과거와는 달리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이따금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A일보 2006. 9. 7. ‘여고생 딸이 눈물 흘리는 이유’ 중에서).

“며칠 전 일주일째 학교를 나오지 않는 A양의 집을 다녀왔다. 반지하 빌라에 사는 그 아이는 형

제 6명인 집 큰딸로 밤에는 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 날은 다음 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졸다가 저녁이면 다시 아르바이트를 가곤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아르바이트를 가면 몸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요즘은 계속 결석중이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6명의 아이를 키우기엔 벌이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 친구는 집에서 용돈을 기대할 수 없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같았다. 좁은 집에 많은 형제들과 생활을 하며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당연히 성적은 우리 반 최하위권이고 아르바이트 해서 버는 돈으로 용돈을 하고 남은 것은 엄마를 드리면 생활비에 보태시는 것 같았다. 상황이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잘 나올 수 없고, 성적이 나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이번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한 우리 반의 B양은 집이 좀 산다. 취미로 재즈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이쪽 계통으로 대학을 보내면 어떨까 하신다. 이 두 학생은 환경을 다르게 타고난 것 이외에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극과 극을 달린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고난 가정배경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어려서부터 포기해야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조차 힘든 A양이 나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지금은 학교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돈을 버는 것이 자신에겐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공부도 못하니 학교생활도 재미가 없다고 한다. A양은 학교에서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방과 후 자율수강권도 주어진다.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자이고 학습능력이 전 과목에 걸쳐 부진하고 학교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같다. A양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상담교사와의 인터뷰)¹⁾

먼저 첫 번째 글을 다시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더 심각한 박탈감은 상대적 빈곤에서 온다는 점이다. 강남 중산층 출신 자녀가 느끼는 불공정함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서열화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국제고-특목고-자사고-일반고-마이스터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의 준거는 성적, 그리고 가정배경이다.

두 번째 글에 나타나 있는 고민은 성격이 또 다른 문제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위와 같은 고민은 교사 개인의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03년부터 시범 실시 되기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2011년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화)이 있다. 이 사업은 교육장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적 평등(redemptive equality)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기선 외(2011).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연구. 부천교육지원청.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 놓았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강력한 드라이버로 인해 학교서열화, 학교의 자본화와 시장화, 성적 지상주의가 가속화되었다. 한편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하는 일제고사식 성취도평가가 진행되고, 교원평가, 학교평가, 교육청평가 등 기관평가도 함께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학교수준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이 방과후 학교 시장을 점령하고 비정규직 학교노동자들이 증가하며,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적극 시도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육의 지방자치제도가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수없는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근본부터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교육문제가 정부에 귀속되고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결정되면 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체로 심리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적 당위성을 가진 목표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교육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심들이 높다. 따라서 무엇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여 무엇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가, 어떤 대안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교육현장은 오류의 반복으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을 통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차기 정부가 추구하려는 방향을 교육공약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서 어떤 대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MB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MB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다름 아닌 경쟁교육이다. 학생들은 시험으로, 교사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으로 서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비인간화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학교다양화 정책이다. 지난 5년간 논쟁이 되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몇 가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제고사의 전면 실시를 들 수 있다. 교육정보공시제도와 함께 일제고사는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학력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 대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는 물론 이거니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시험으로 서열화하고 있고, 영교사와 강제된 자율학습,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획일적인 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애시당초 이 제도는 학력미달자를 확인하여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강행을 예고했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추가재원을 배정하고, 우수교사를 배치하며, 관련 학습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전년대비 향상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학교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에서는 일제고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국가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 교육과정 개정, 교수
 - 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별, 영역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 학교 간 선의의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제고사 시행 4년이 된 2012에도 예외없이 6월 26일 전국 모든 초6, 중3, 고2 학생들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해야만 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제고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제고사 참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서 해임처분을 가하고, 대안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하지 않고, 방학 중에도 문제풀이식 수업에 초등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학교경쟁과 시도교육청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하여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더욱 평가를 정교화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를테면 향상도 지표를 추가하여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성장률을 드러내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해 본다면 결코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학교교육이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교원평가제의 평가목적은 교원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평가대상은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감 및 교장이며, 평가자는 동료 교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 관찰)과 학생, 학부모이다(교육부, 2006). 교원평가는 국가에 따라 형태와 결과의 활용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는 교사의 승진·전보와 같은 인사관리 자료로만 활용될 뿐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맹점 때문에 능력 개발보다는 승진에만 집중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런 제도만으로는 지식 중심의 21세기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교원평가는 취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형식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피드백 부족,

자료의 신뢰성 부족, 활용방안 부재 등 그야말로 하나하나한 평가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서 근무평정과 성과급제가 여전히 교사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교원을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추구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이고, 과연 이러한 다양한 평가활동이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질적 성장을 보장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은 벌써 ‘자율과 책임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편, 2002)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책에서 기술되고 있었던 학교제도 다양화와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중등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기존의 특수형 학교를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하며,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대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선발, 교사 및 교장인사, 교육과정의 선택, 수업료 책정 등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박세일 외, 2002:24)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사항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 운영(법인전입금, 등록금) 규제를 일부 낮추는 학교(최소 100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약 2500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가 바로 유사한 이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 아울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인수위백서-성공 그리고 나눔’(2008. 3. 24)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여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 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5년 동안 줄곧 추진되었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대거 양산하게 되었다. 여기에 서울시는 학교선택제를 도입,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간 차이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이제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도록 제도화되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의 등장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구조 하에서 고등학교 자율화, 특성화는 입시명문 학교를 양산하게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고교 다양화는 학부모에서는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조성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게 된다. 학교체제의 다양화는 경쟁을 통한 선발, 입시위주 교육의 강화,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 등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²⁾

또한 다양한 선발형 고등학교가 증가되면서 당연히 평준화 정책은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강원도 강릉, 원주, 춘천과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서 민선교육감의 노력으로 2013년 평준화 도입이 결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정도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사이의 갈등과 우역곡절을 겪은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전국 수준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위계적 서열화는 고등학교 구조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넷째, 대입자율화 정책.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해 왔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나름의 강점이 있다.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성적 이외의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성적보다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더 받는 비교과활동을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회적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 외 활동에 관한 스펙들을 음으로 양으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부담,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입학사정관 선도대학들이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 인력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지원에 의존하여 입학사정관을 뽑고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다. 대입자율화라는 명분이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대입 타율화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이다. 현재 전체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차지하는 정원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서울대에서 수시 정원을 80%로 늘리면서 지원자 전원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스펙 자료를 제약 없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스펙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는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선택형 수능체제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를 A/B 형으로 구분하여 진로별로 선택해서 치르도록 함으로써 대학도 혼란스럽고, 이를 준비시키는 고등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더욱 증가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대입자율화의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 검토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리라 본다.

다섯째,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문제. 최근 학교는 급속도로 불안한 공간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왕따,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 부분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편안하고 지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역기능을 더욱 심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예방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인 폭력의 실재는 중요하지 않다. 주관적인 구성원들의 불안도에 대한 인식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표1〉 참고).

2) 성기선(2012), “고교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강명숙 외(2012), 새로운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터.

<표1>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2008~2011년)

연도	심각성 인식도
2008	28.6%
2009	32.8%
2010	38.1%
2011	41.7%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실태조사 요약본.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 학생 자살률 역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성적비관, 가정형편 비관, 학생폭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는 어떻게 담당하였던 정책 담당자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임에 분명하다.

이상 제기한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더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과의 갈등과 혼선, 오펜취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조기교육 과열화, 선행학습 등 사교육문제, 집중이수제의 혼선 등을 들 수 있다.

3.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

18대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새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아직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제시했던 공약을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공약에 제시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은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³⁾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실천 과제와 여덟 가지 약속을 공약한 바 있다.⁴⁾

1) 네 가지 실천 과제

- ①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 ③ 교육의 경쟁력 제고
- ④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2) 여덟 가지 약속

새누리당은 이에 덧붙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여덟 가지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정리는 ‘박호근(2012). 정당별 교육공약 분석 및 합의점 찾아내기’(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홍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주체 ‘대선헌약4차 토론회 2013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대선 후보별 교육정책 분석 및 합의점 찾기-토론회 발표자료’)의 내용을 참고한 것임.

4) http://www.saenuriparty.kr/web/extend/board/extendBoardView.do?bbs_id=FRM_000000000339596

- 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
- ② 교원 확충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 ③ 대입부담 대폭 감소 및 대입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④ 교육비 부담 경감
- ⑤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 ⑥ 학벌사회 타파 및 능력중심 사회 구현
- ⑦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 ⑧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3) 세부 공약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

- ① 꿈과 끼 살리기
 - 적성과 소질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 1인 1예술·1스포츠 교육 제공
- ② 대입부담 감소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학입시 단순화
 - 대입전형 계획 3년 전 예고 의무화
- ③ 전문인재 양성
 - 직업교육체제 내실화·전문화
 - 재직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④ 교육환경 향상
 - 신규교사 채용 확대
 -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2)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 ① 교육비 부담 축소
 - 고교 무상 의무교육 제공
 - 교과서 완전학습체제 구축
- ② 능력중심사회 구현
 -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 직무능력 표준화하여 제시

(3) 경쟁력 있는 교육

- ① 교육경쟁력 제고
 - 지역 학문단위 특화된 대학 유도
 - 지방대학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
 - 취업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

(4)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① 평생학습 체계 구축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어르신의 전문성과 인생경험 공유

이상의 것을 정리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표 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

과제	약속	실천방안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 자율성 강화,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 운영 •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 1인 1예술·1스포츠를 학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상담치료 과정의 대폭 강화
	2. 교원 확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맞춤. •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 대폭 축소 •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3.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 대입혼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 예고 의무화 •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 구축
	7.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체제 내실화·전문화로 ‘꿈과 끼’를 살린 성공 지름길 만들기 • 재직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국비 해외 유학기회 제공 •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과정 설치 유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	4. 교육비 부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되도록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6.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표준화하여 제시 •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 도입
교육의 경쟁력 제고	5.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및 학문단위 특성화 추진해 각 대학별 특화된 대학 유도 •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지원 • 대학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 OECD 평균 수준 GDP 대비 1% 수준 달성 • 대학별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대폭 확충

과제	약속	실천방안
평생학습 체계 구축	8.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 등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체제를 강화 •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 경험 공유

출처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캠프 보도자료(2012.11.8). pp.2-3.⁵⁾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총 10개 영역의 대선공약을 발표하였다. ①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②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③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④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⑤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⑥ 차별 없는 고용시장, ⑦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⑧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⑨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⑩ 안전한 사회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은 ⑧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⑨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⑩ 안전한 사회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타난 주요 정책과 세부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선관위에 명시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대영역	목표	이행절차 및 기간	재원조달방안
⑧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 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 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⑨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과 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5) http://www.park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195&bid=IIX028

대영역	목표	이행절차 및 기간	재원조달방안
	제고를 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발표할 계획
⑩ 안전한 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 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⁶⁾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공약들은 나름의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학교안전망에 대한 구체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인1예술1스포츠 교육 강화, 맞춤형 진로컨설팅, 신규교사 채용 확대,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직업교육강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고교무상 교육 추진 등은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기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 분명하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예측을 해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가 안고 있던 교육문제의 심각성에 기초한 문제해결방안 도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된다. 앞서 제기한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 분석과

6) <http://party.nec.go.kr/people/publicpledgepolicy/precandidatepublicpledge/presidentelection/read.shtml>

7) 2013 교육연대에서 제안한 교육정책 의제 14개 중에서 대학등록금,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대입제도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2013 교육연대가 제안한 14개 정책의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 유·초·중·고 무상교육, 3) 공교육 정상화 모델 ‘혁신학교’ 확대, 4)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도입, 5)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7)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8) 대학입시제도 개선, 9)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10)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 11) 고교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확대, 12) GDP 7% 교육재정 확보, 13)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부패방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출처:2013 교육연대 현장 정책제안 원탁토론 보고서).

대안 창출이 되지 않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나열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문제점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먼저, 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일제고사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차제에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전환하여 연구용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기 어렵다. 선행학습이 과도하고, 학교교육이 부실해 지며, 학생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근본 이유는 다름 아닌 특목고와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의 확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를 시도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교원평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교원전문성향상을 위한 평가, 근무평정,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평가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평가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제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운영권자 중심의 사립학교운영을 정당화하고 강화시켜 나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또다른 갈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 대학정책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공약에 제시된 대학정책의 핵심은, 지역단위 및 학문단위 특성화를 추진해서 각 대학별 특화된 대학을 유도하며, 지방대학 권역별 특성화, 대학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그런데 지역별 특성화 학문단위별 특성화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으며, 한편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벌타파를 위한 근본적 조치가 없이 부실한 대학을 어떻게 할지,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격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해야만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을 둘러싼 이념 논쟁, 근현대사 재해석 문제 등이 불거져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갖는 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건전한 논쟁조차 위험시하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또 다른 갈등양상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유신, 반공, 친일 등의 문제에 대한 새정권 주변 세력과 인물들의 주장이 더 강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새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

육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인지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에 조삼모사식 교육 정책으로 조롱거리가 될 우려가 있다. 이제 교육문제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아마추어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적 식견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적절히 소화해 내는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 시간에 다루어진 논의내용들이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공약) 분석과 대응 : 초중등을 중심으로

이 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서리)

1.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과부의 업무 보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교과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도 물론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지금으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교육공약을 통해서만 그 대략적인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을 뿐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공약 이행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은 교육복지적 성격을 띤 공약들이 가장 두드러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 고등교육재정 확대, 초등온종일 돌봄학교,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교원충원, 교육행정인력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정확충의 한계(박근혜 캠프의 추계로도 소용 비용이 연간 18조원에 이른다.)나 보수 세력의 반발로 상당한 왜곡과 축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일정한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지난 MB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짓밟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강한 부분이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공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초등 일제고사 폐지(중학교 과목 축소),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입간소화(그 중심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리하면, 적어도 정권 초반기(특히 지방선거까지는)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일정한 복지 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지배세력 내부의 조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발제가가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경쟁교육체제에 대한 명확한 단절 의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경쟁교육체제에 대한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 지난 시기 경쟁교육정책에 의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 것은 고교 서열화이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특목고에 자사고 확대와 학교 선택제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해체된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 도지역의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학교(공립형 기숙 학교, 거점학교) 등 선택과 집종의 방식에 의해 고등학교 서열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되면서 초중등 단계의 입시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불가능한 사태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심각한 교육위기와 교육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교 서열화 폐지를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한 경쟁과 차별화 정책이 학교 현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평가와 차별을 통한 경쟁강화 정책의 결과는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입시교육의 조기화 및 심화, 교육주체간의 갈등의 확대 및 사기저하,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 및 업적 중심의 학교 운영 등 오히려 학교의 기본적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부분적인 손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약대로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연계시키는 것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로서 교원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붙어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증(對症)요법에 가까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현재 교육과정의 가장 큰 현안은 강제적인 집중이수제, 교육과정 자율화에 의한 국영

수 편중의 심화, 인문-사회-자연 과학 과목 및 예체능 과목의 축소, 주5일제에 조응하지 못하는 과도한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지나치게 어려운(높은 난이도) 교육과정 등의 문제이다. 하지만 공약에 제시된 관련 내용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도이다.

학교체육활성화는 지난 정권에서 매우 급조된 방식으로 시행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 번 공약에서도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조정 속에서 예체능 교육의 강화차원이 아닌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원의 충원도 스포츠 강사라는 무자격-비정규 교원 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도 매우 돌출적인 공약이다. 그 취지와 상관없이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와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중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대중요법에 가까우며, 인권침해적 요소도 다분하다.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CCTV 설치, 지킴이 확대, 정서행동발 검사 확대 등 주로 치안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폭력 사태를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 가능한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북돋아주고 학교의 주체들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과제이다.

교육3주체간의 생활협약 체결, 학교자치의 강화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대학교-과밀학급 문제의 해결,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폐지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등을 바꾸어낼 계획이 필요하다.

▷ 대입제도 간소화도 지금 너무 많은 대입전형(약 3000여개)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통스럽고, 결국 정보 경쟁력이 있고 맞춤형 사교육이 가능한 상류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과도기 방안으로 대입 간소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입이 간단하였던 시기에도 입시경쟁이나 사교육이 결코 지금보다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 간소화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사실 교육공약의 핵심 모토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의 핵심적인 학교 모델은 혁신학교 실험이다. 따라서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특히 혁신학교의 실험이 성공하고 이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증 폐지를 통한 민주적 교장임용(내부형 공모제-선출보직제)제도의 개선,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학생회와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공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의 학교 체제와 권력구조를 온존한 채, 교육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 우선 긍정적인 성격이 강한 공약들이 존재한다. OECD 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원정원 확충, 교원행정인력 확충, 고교 무상교육 등이 초중등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약이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항목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초등은 8명 정도, 중고등학교는 15명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무런 예산 투여 없이 가능하지 않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원정원 확충이나 행정인력 확충도 비정규직(스포츠 강사나 영전강 그리고 행정보조사처럼)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감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육관료들의 저항을 뚫을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진로상담교사 확대 배치는 지난 정권에서는 기존의 교원정원을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현장 교사들이 불만이 많았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많다. (교무행정인력 배치도 기존의 일반행정인력을 감축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공약의 이행박식, 우선 순위, 이행속도, 이행의 폭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양면성을 지닌 공약도 존재한다. 초등은종일돌봄학교는 맞벌이 부부나 어머니가 파트타임 노동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현실적인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니라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일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각종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으며,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돌봄교사들의 고용 형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예산이 돌봄학교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돌봄학교 운영을 보건복지나 지자체의 소관으로 돌려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경우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공허한 정책이 되기 십상이다.

○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반 구도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대학통합 운영방안, 수능대입자격고사화 방안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매우 근본적인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거에 닥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여론화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 시기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고 다듬고 여론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대중적 요구로 발전할 수 있다.

- 교육단체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위기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교육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경쟁교육중단, 교육여건 개선, 교육제도 개혁 등을 위한 교육단체의 다양한 실천들을 ‘교육위기 극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수렴하는 것은 어떨까 고민했으면 한다.

학부모 눈으로 본 새 정부 교육정책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이명박 정부의 교육하면 영어몰입교육으로 시작해 학교 다양화, 일제고사, 학교폭력 등이 떠오른다. 이들 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경쟁’이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외치며 시행된 정책들이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외면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더 이상 피폐해져가는 학교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이 학교를 외면하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짐 지워진 경제적인 부담을 내려놓게 할 수 있겠는가. 학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지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볼 대목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쟁교육과 고교다양화 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쟁과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제고사 도입, 학교 선택권 도입(서울시)이 이루어졌다. 기존 특목고 외에도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한 결과,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하에서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경쟁만 남겨두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

고교 유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얼핏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고교간 서열을 낳고 있다. 성적순으로 학교를 가야하는 현실이 중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어 사교육비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매우 심하다. 결국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상위권 고교→상위권 대학→대기업 취업 대열에서 아이가 처지지 않으

려면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아이들이 잠재력을 싹 틔우게 돕고 소질을 탐색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적순위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교육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고 있는 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하겠거니와 고교 다양화 정책보다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12년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 옳다.

2. 대입 제도 간소화

새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정책이 ‘대입부담감소’다.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입부담을 감소를 위해 ①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②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③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으로 공약한 것치고 획기적인 대목을 찾을 수가 없다.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초, 중등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로 인해 번창하는 사교육 문제, 학교폭력으로 얼룩져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성적위주의 대입선발제도가 고착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겠다는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입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수능 성적이다. 수능 성적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표시되고 이를 근거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범주도 실로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명문대 합격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골라 뽑으려는 대학들과 수능에 목숨거는 풍토를 바꾸기에는 새 정부의 대입부담 감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수없이 많이 거론되어왔던 수능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전형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지금처럼 성적으로 줄 세워 우수학생 골라뽑기대회 마냥 손쉽게 학생을 선발하게 내버려두어서는 곤란하다. 수능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정부정책이 변화해야 초, 중등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폭력과 안전망 문제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한 언론의 다큐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창원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들 재판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다

루면서 보니까 기성 사회의 권력, 차별 등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년에 한 번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0·2011 상담활동사례집」에 따르면 2010, 2011년 총 상담건수 1,145건 중 학교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15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13.3%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8.8%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고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① 연 2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강화, ② 학교폭력 징계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③ 인성관련 입학전형 반영 등을 내놓았다. 여전히 일이 벌어진 이후 면피하려는 대책에 불과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내고 벌주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쟁 일변도의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 안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

새 정부는 반드시 정당과 이념을 초월하여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교육제도와 정책의 틀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1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와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를 보면, “소득 분배와 양성평등, 사회적 계층 이동 등의 형평성 지표는 모두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생동안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28.8%로 2년 전의 35.7%에 비해 낮아진 반면, 그 가능성이 낮다는 비율이 58.7%로 2년 전의 48.1%에 비해 갈수록 높아졌다.”(박명섭, 교육의 배신 내몰리는 아이들, 129쪽)

이제 더 이상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처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스펙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과 무능력 탓으로 돌려지고 경쟁에서 이탈하여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하고, 경제적 처지에 따라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교육복지의 첫 발은 내디뎠다. 체계화된 시스템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선인이 공약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대학 등록금 정책과 사학재정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 대학 등록금은 우리 사회 주요 현안 과제이자 교육·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가 됨. 대학 등록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배경은 ‘등록금 폭등’을 꼽을 수 있음.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물가인상율의 2~3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에 달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의제였고,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됨.
-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밝히고, 이명박 정부 국가장학금 제도 기초를 유지하되 예산 규모를 2013년 2조 7,750억 원에서 2014년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2. 박근혜 정부 등록금 정책 전망

(1) ‘고 등록금’ 정책 기조 유지

- 박근혜 당선인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대학 등록금을 현행대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함. 물론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비싼 등록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함. 현행 법에서는 등록금을 물가인상율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대학별 상황에 따라 등록금 인상은 계속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장학금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 등록금’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음.
- 등록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음. 18대 국회에

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것은 법·제도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시하지 않음. 이렇게 될 경우 국가장학금 예산마저도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안정적인 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음.

- ‘반값등록금’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대학자체노력 3조 원 예산도 변수가 큼. 대학들이 정부 요구대로 매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개혁 이끌어내기 어려움.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는 고등교육재정 부족과 함께 사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임. 그동안 사립대학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학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소홀한 탓도 큼. ‘등록금 정책’에 수 조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개혁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최근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330억 원 횡령, 극동학원 전 이사장의 200억 원대 교비 횡령 등 사학 운영자들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1년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시 지출은 과다, 수입은 과소 계상해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증명됨. △이 외에도 2011년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논란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2,643억 원 늘어 2012년 2월 말 현재 10조 원에 달함.
- 이와 같이 사립대학들의 불법·부당 운영이 만연해있고, 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큼.

(3) 성적기준, 소득파악 등 문제점

- 이 외에도 △B학점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신청자 7명 중 1명 탈락 △2월 중~하순 시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정확한 장학금 액수와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알 수 없는 문제 △가구소득 파악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가구소득 기준에 따른 장학금 대상자가 불합리하게 선정되는 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의 문제점이 답습될 가능성 큼.

3. 나가며

- ‘등록금 정책’은 심각하게 비싼 대학 등록금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춰

야 한다는 경제적 요구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학개혁 요구까지 담아내야 함.

-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사학 의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수립해야 함.

고등교육 문제와 반값등록금

임재홍(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 고등교육의 문제와 반값등록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아주 많다. 지난 몇 년 간 고등교육의 문제는 반값등록금으로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으로 표상되는 고등교육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이 논의해야 하는 주제로서 고등교육의 기본 형태, 대학서열의 문제, 고등교육의 질낮은 서비스,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무엇보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이 입시입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되는 원인이다. 얼핏 보면 대학서열의 문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뿌리로 들어가면 대학서열의 문제와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함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대학서열화는 양극화된 사회, 학벌사회가 원인이지만, 사립대학이 과도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 사립대학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 사립대학이 많을수록 대학들은 제각기 생존과 지위상승을 위한 서열경쟁에 매달리게 된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불가피해지고, 초중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한다.

반값등록금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비의 과다로 인한 것이다. 교육비의 과다 역시 사립대학의 과도한 데에 원인이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2009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49위(2008년)이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OECD가

적정 등록금으로 생각하는 액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그 원인은 당연히 사립대학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사립학교 등록금이 국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지만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한국 78%, 일본 75%)이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등교육의 질낮은 서비스 역시 그 원인이 과도한 사립대학의 존재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국가가 고등교육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과다문제가 발생하지만, 국가의 재정여건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거의 무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지난 20여 년간 교육행정기관은 대학을 시장화, 사립대학화, 영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전에 이들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 경쟁과 입시교육은 그냥 이유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문제해결의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기초를 변경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사립대학이 80%를 상회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공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장, 아니면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법인이사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신설 역시 현재와 같이 대학의 과다 공급 상태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립대학 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반값등록금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학개혁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전반적 문제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박근혜 당선자는 2012년 11월 21일 발표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에는 75%, 5~7분위에는 50%, 8분위까지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9분

위, 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실질적인 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중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다. (주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대학들이 등록금을 결정하면 이에 대해서 소득분위별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리성 여부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현상의 유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법인에 무조건적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인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서열화 문제나 사교육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나 같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값등록금 정책은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고등교육의 구조개혁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야권과 교육단체들의 고등교육정책은 일보 진전된 측면이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관리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등록금 상한제, 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지원을 받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재정투입에 상응해서 법인이사회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적어도 과반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공익형 이사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정부독립형 사립대학에 대해서까지 지배구조의 변경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4. 대학서열화와 사교육비 문제

고등교육개혁의 대안으로 종래 유력하게 제시되어 온 것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안이었다. 즉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이 표현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처럼 국립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지가 의문이다. 국립대학만의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전면화된다고 해도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에서 과연 정책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대와 인천대까지 사립대학이 된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전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공립대학위주로 고등교육정책을 펼 수 있으려면 국공립대의 신설·확장이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재정도 이 부분에 맞추어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이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과 같은 선상에서 대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대학만의 통합네트워크가 아니고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아우르는 가칭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고등 교육체제로 발전시켜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보편적인 고등교육체계가 50%를 상회하게 되면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없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단초를 열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육자치의 과제와 전망

김현국(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 담당관)

1. 교육자치의 이유

-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행되고 있음
 - 세계 표준
 - 헌법(교육의 자주성,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전국 모든 시도에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 직무 중
 - 정책·재정·인사 등의 지방자치 본격화
- * 학생마다의 진로, 성격, 지능, 조건의 고유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불가능
- * 모든 학생이 고유성에 맞는 최고의 학습기회를 갖도록 현장과 가까운 지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

2. 국회와 중앙정부의 역할 현대화

- * 국회와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은 표준 법제 마련, 현장 학습 환경 지원, 시도 격차 완화, 획일적 규제 완화
- * 선진국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단순한 기준(학생 수, 학교 수; 법으로 규정)으로 배분
 - 의회 통제를 벗어난 특별교부금 제도 정비
- * 유아보육의 관할·재정 부담 분리를 정상화, 선행학습 금지 등의 법률 정비
- * 교직원 정원을 OECD 수준으로 현대화, 지방의 인사권 보장
- * 집중이수제, 일제고사 방식 성취도 평가 등 획일 규제를 폐지
- * 자사고·외고·국제중 지정 및 취소, 시도교육청 실·국의 수, 지역교육지원청의 설치,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비율 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 상시 지속적 업무의 학교 비정규직 15만 명의 신분 안정 방안 마련

3. 새 정부의 입장 분석

- * 교육자치 내실화와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정책 발표, 발언 등을 찾기 어려움
- * 교원정원 확대, 학급규모 적정화, 고교무상교육, 국가미래교육위 설치 등은 경기 혁신교육 등 현대적 정책 흐름에 부합하므로, 작동 가능한 실행 계획을 기대

공교육정상화와 비정규직 문제

이태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여섯 번째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수도여고에 출근하는데 아들이 “엄마 괜찮겠어요? 정말 출근하기 싫겠다”

“아들! 걱정하지 말아 엄마는 씩씩하잖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합니다.

교무실 분위기는 개학날이라서 선생님들은 분주히 일을 합니다. 나는 평소에 그랬듯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쯤 시간이 지난 후 교장샘이 좋은 글이라고 읽어보라고...

‘간절한 소망’ 아침에 글 한편을 받아 교직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저의 가슴에는 소금을 뿌린 듯 아픔입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해고되지 않고 오래오래 내가 잘 할 수 있는 특수지도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간절한 소망)

강산이 변하는 세월 하나하고도 반을 더 넘겼습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뭐했나 싶기도 하구요.

내가 싫어하던 늙은이 행세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 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갑자기 잠도 잘 오지 않을 때가 많고,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깜빡하는 횟수도 늘어나는 것 같고, 손에 쥐고도 이리저리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멍하니 무위도식을 자탄하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아주 싫어하는 늙은이 짓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천지신명께 부탁하노니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고약한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주위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 보고자 하는 헛된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지 못하고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장년기처럼 활기차고 여유로우며 유머를 갖게 하소서.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없는 곳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버릇을 거두어 주소서.
제가 가진 보잘 것 없는 지혜의 창고를 과장해서 오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에게도 친구가 몇 명은 남아 있도록 도와주소서.

1월 31일까지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애태우던 선생님이 우편해고통보를 받고 개학식날 학교에서 문자로 전해준 사연입니다.

지켜보던 아들에게 불안감이 전해지고... 씩씩한 분이신데 가슴에 또 하나의 낙인이 찍혀지면서 ‘간절한 소망’ 글을 읽고 전하는 심정을 느껴봅니다.

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신 교장선생님의 간절한 소망은 가르치려 참견하지 말고, 활기차고 여유로우라는 당부이며 좋은 글로 조심스럽게 직원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경쟁과 서열의 불평등한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이 비정규직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외면 할 수 없습니다.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낙오하면 비정규직이 신세가 된다고 협박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된 5년 동안 학교의 비정규직은 8만에서 15만으로 증가하였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감소된 것이 현실입니다.

신분에 의한 역할과 처우가 확연히 차별되는 학교에서 노동의 가치와 평등권의 실천을 여유로운 유머로 포장할 수 없으며 진심을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절망감과 폭발되는 분노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눈길이 채 닿지 못하는 곳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시설관리인이라 청소와 분리수거하는 봉사 역할에 문제아들이라는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작은 권한과 책임을 주었더니 지나치던 중에 엉덩이를 건드려 주고 가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교육가족이라는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을 제한하고 해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학교회계직원 연차별 증감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교회계직원 (전년 대비 증가율)	88,689	96,937 (9.3%)	118,052 (21.8%)	130,456 (10.5%)	152,609 (16.9%)
지방공무원 (전년 대비 증가율)	63,905	61,546 (△3.7%)	62,385 (1.4%)	62,616 (0.4%)	63,000 (0.6%)

※ 2012년도 무기계약직원은 71,953명(47%)

비정규보호법 시행 5년간 무기계약 전환 비율

	학교비정규직 인원 증가	무기계약 전환 인원	전환 비율
2008년	88,689명	73,675명	82%
2012년	152,609명	71,953명	64%

※ 2012년도 학교비정규직 현황 참조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은 직원으로의 사명감과 역할을 감소시키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교과부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직종은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71,953명('12, 64%) → 88,654명('13, 78%) → 112,903명(추정)('14, 100%) 발표했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에게만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면 15만 명중에 8만 명은 해고의 위협에 있다는 것이며, 계획이 실현되려면 한명도 해고되어서는 안됩니다.

2012년 대구교육청은 사서 380명의 사업종결을 선언하여 당사자들은 일년내내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또 다른 비정규직을 400여명 신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해고의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순간에도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 돌봄서비스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강화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장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사업비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을 후임 교장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를 통보합니다.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장선생님께 생존권을 박탈시켜야 하는 관리자의 악역을 떠넘기게 하여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철학을 훼손하고, 학생들이 목격하며 자라게 되어 교권이 비정규정책에 의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양산되고 해고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습

기간 동안 평가 한 후에 정원으로 관리해야만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의 폐지와 변경, 시범사업 운영 등에 의한 해고는 교육정책에 의해 해고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배정된 것을 집행만 하는 학교단위가 해고요인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미리 짚라내고 보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 감소되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별 배정과 자연감소 인원을 교육청차원에서 재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인 학교 선정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학교배정과정에서 제외된 인원은 새로 선정된 학교로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유사한 사업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됩니다. 사업에 따라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정책의 잘못입니다. 유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인건비를 사업비와 분리 운영하여야 고용 안정이 보장됩니다.
- 한시적사업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은 정책에 의한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한시적 사업은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며, 선출직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항들입니다. 가장 큰 치적으로 선전하는 이면에 해고를 예약해둔 비정규직이 있고 사업폐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당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 평가에 의한 해고방식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료들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3번 받으면 해고시킬 수 있으므로 동료들 간에 편가르기를 합니다. 40점 이하면 무기계약을 안해줘도 된다는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70점 이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제도가 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육 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로 채용된 말 잘 듣는 비정규직만을 양산하여 맡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

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게 되어서는 비정규직 관리업무만 증가 될 뿐입니다.

기존의 275일제 근무자를 365일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업무량을 증가 시키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비정규직간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누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권한과 책무가 함께 제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수-학습>을 최우선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수-학습을 중심에 두면 교사가 중심이고 주변은 보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아서 해야 할 일을 잡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잡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교수 학습이 잘 이루어 지도록 뒷받침하는 담과 노동의 소중함도 배우고 체득하는 노동교육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비정규직의 채용방식도 사업비에 포함하던 방식에서 인건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의 종결과 변화에 의해 경력자의 성과가 소멸되어서는 공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특성교육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더 많은 전문영역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은 현재에도 80여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에게도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자기개발을 하여 성과를 쌓아나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킵니다.

학교에 공무원과 교원인 정규직이 배치되어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하여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차별에 대항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으로 가득 찬 우리사회가 모두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요구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정규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교원의 법정정원을 침해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요인을 교육청의 정원으로 규정하고 교직원의 일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므로서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가 학생들에게도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1)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 3)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 4)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 5)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참고 1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

(단위: 명, 2012.4.1 기준)

연 번	시도별	공립학교			사립학교			행정기관			합계		
		무기	기간	소계	무기	기간	소계	무기	기간	소계	무기	기간	합계
1	교무보조	7,109	4,614	11,723	479	936	1,415	1	1	2	7,589	5,551	13,140
2	과학보조	3,256	961	4,217	83	321	404	159	57	216	3,498	1,339	4,837
3	전산보조	1,397	507	1,904	59	131	190	23	18	41	1,479	656	2,135
4	사서(보조)	1,633	2,247	3,880	114	304	418	68	243	311	1,815	2,794	4,609
5	유치원 교육보조	329	332	661	0	0	0	0	1	1	329	333	662
6	사무보조	2,358	1,590	3,948	250	517	767	79	398	477	2,687	2,505	5,192
7	학부모회직원	3,246	77	3,323	715	294	1,009	0	0	0	3,961	371	4,332
8	시설관리직	77	453	530	108	193	301	23	65	88	208	711	919
9	매점관리	16	36	52	7	8	15	0	3	3	23	47	70
10	청소원	171	637	808	176	371	547	29	60	89	376	1,068	1,444
11	당직전담직원	43	257	300	82	323	405	0	6	6	125	586	711
12	사감	100	390	490	155	410	565	2	4	6	257	804	1,061
13	초등돌봄 전담강사	960	5,222	6,182	11	49	60	0	3	3	971	5,274	6,245
14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14	2,797	2,811	18	324	342	21	95	116	53	3,216	3,269
15	유치원종일반강 사	631	3,566	4,197	15	14	29	0	14	14	646	3,594	4,240
16	체육경기 지도사	61	4,318	4,379	47	634	681	9	36	45	117	4,988	5,105
17	통학차량보조	375	1,200	1,575	129	149	278	2	4	6	506	1,353	1,859
18	특수교육보조	2,788	2,836	5,624	361	620	981	9	65	74	3,158	3,521	6,679
19	영양사	2,574	1,159	3,733	456	617	1,073	12	14	26	3,042	1,790	4,832
20	조리사	5,340	683	6,023	586	413	999	6	4	10	5,932	1,100	7,032
21	조리원	30,909	10,647	41,556	3,340	4,197	7,537	80	50	130	34,329	14,894	49,223
22	배식보조	130	3,498	3,628	12	487	499	0	0	0	142	3,985	4,127
23	사회복지사	8	109	117	0	10	10	7	158	165	15	277	292
24	평생교육사	1	2	3	0	0	0	52	23	75	53	25	78
25	교육복지사	62	1,125	1,187	3	133	136	19	136	155	84	1,394	1,478
26	전문상담원	9	1,390	1,399	3	292	295	16	411	427	28	2,093	2,121
27	기타	188	12,750	12,938	154	1,703	1,857	188	1,934	2,122	530	16,387	16,917
총계		63,785	63,403	127,188	7,363	13,450	20,813	805	3,803	4,608	71,953	80,656	152,609

학교회계직 직종별 직종이해

직 종 설 명			
번호	직종명(비정규직)	직종별 관련내용	직종 설명
1	구 학부모회직원		- 중고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상 정원의 범위에 속하는 직원으로 담당업무를 불문)
2	교육보조사[교무보조]		- 학교에서 교무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3	교육보조사 [과학실험보조]		- 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지역청 소속 발명보조 등 포함)
4	교육보조사[전산보조]		- 학교의 전산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5	교육보조사[사서보조]		- 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채용 한 직원
6	교육보조사 [유치원교육보조]		- 유치원에서 교무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7	교육보조사[실습보조]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습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
8	기록물정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 채용자격 :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유경험자 ○ 수행업무 : 기록물 정리 및 색인 입력, 스캐닝, 서가배치 등 	- 지역청 등에서 기록물 정리를 위해 채용한 직원
9	프로젝트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과부훈령 제203호 ○ 채용자격 : 교육·문화·복지 분야 4년이상 경력 ○ 수행업무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사업 	- '교육복지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
10	지역사회교육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과부훈령 제203호 ○ 채용자격 : 교육·문화·복지 분야 2년 이상 경력 ○ 수행업무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사업 	- '교육복지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
11	전문상담사 (사례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과부훈령 제203호 ○ 채용자격 : 교육·문화·복지 분야 2년 이상 경력 ○ 수행업무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사업 	- '교육복지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원
13	중학교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 채용자격 : ○ 수행업무 : 	- 중학교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채용한 직원
14	학부모코디네이터 (방과후코디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683(2011.02.11) 방과후학교 사업계획안, 2012년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정교부알림(2011.10) ○ 채용자격 : 학교교육활동에 이해가 높은 학부모 ○ 수행업무 :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 수강신청에서 부터 수강료 미납 등 관리.안내 -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근로계약 대상이 아님) - 2012년부터 학부모코디네이터 고유 사업은 종료됨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에서 인건비(코디맘 봉사료, 비정규직, 일용직 등) 지원가능
1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2011 창의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2011.1. 교과부) ○ 채용자격 :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자 ○ 수행업무 :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 및 나이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용 지원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및 우수강사, 운영사례 보급 - 학생 학부모,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직 중 설 명			
번호	직종명(비정규직)	직종별 관련내용	직종 설명
16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전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2011 창의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 (2011.1. 교과부) ○ 채용자격 :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자 ○ 수행업무 :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재능)기부자모집및관리 - 문화예술활동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CRM개발
17	자기주도학습전형 전입입학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외국어고, 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원을 위한 입학사정관 운영비 지원계획 (중 등교육정책과-22095, 2010.05.13) ○ 채용자격 : 고입 전형 전문가 ○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업무 총괄 기획·추진 - 진학, 진로지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입학 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채용 - 학교별 자기주도학습 전형 업무 및 진학, 진로 업무전담 - 2012년 교육청 예산 50% 대응투자, 2013년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예정
18	영어회화전문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초중등교육법 22조 ○ 채용자격 : 교원자격증 등 영어교육가능자(시도교육청별 지 원기준 자격설정) ○ 수행업무:초중등학교영어수업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회화전문강사(다른 법령에 사용기간을 달리 명시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제5항
19	유치원에듀케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예산정보담당관 -20666(2011.12.26) ○ 채용자격 :유치원교사,보육교사자격(전문대학 이상 졸업한자)소지자 ○ 수행업무 :유치원 종일반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강사
20	유아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종합계획(초 등교육정책과-10160, 2007.06.29)조례 공포 제4572호(예산법무담당관-9763,2007.09.27) ○ 채용자격 : 유아교육, 음악, 미술 전공, 1차서류전형, 2차면접을 통해 채용 ○ 수행업무 : 유아체험교육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직원
21	유치원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미래인재교육과 -655(2012.01.12) ○ 채용자격 :40-60대 여성 ○ 수행업무 :유치원 종일반 활동보조 및 급간식 보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하모니 봉사자(672개 유치원)
22	희망유아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202(2009.02.03) ○ 채용자격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상기 자격소지자가 없을 경우, 아동학, 발달심리, 초등교육 전공자도 가능) ○ 수행업무 : 저소득층, 결손가정등 발달지연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발달지연 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23	학부모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학부모지원정책(교과부) ○ 채용자격 : 자격증 소지자 ○ 수행업무 : 학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상담 담당
24	행정업무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원어민교사배치사업(미래인재교육과-26884, 2011.12.30), 영어교사연수지원사업(미래인재교육과-26742,2011.12.28), TEE 인증제사업(미래인재교육과 -26741,2011.12.28) ○ 채용자격 : 학력,성별 제한없음. 엑셀 등 전산 프로그램사용가능자 ○ 수행업무 : 원어민이력데이터 관리, 영어교사연수이력데이터 및 TEE인증제 관련 행정업무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이력데이터 관리 업무 및 사무보조 -Tee인증제사업관련업무및사무보조 -연수이력데이터관리업무및사무보조

직 종 설 명			
번호	직종명(비정규직)	직종별 관련내용	직종 설명
25	기간제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채용자격 : ○ 수행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사(다른 법령에 사용기간을 달리 명시함-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3년의 임기)
26	도서관연장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서(문화체육관광부) ○ 채용자격 :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경력자 ○ 수행업무 : 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자료실 및 자율학습실의 야간연장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직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접 일자리 창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조인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됨('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이한 일자리 종사자'에 해당)
27	초등돌봄교실전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 ○ 채용자격 : 유초중등교사 및 보육사 ○ 수행업무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강사(1일 8시간 근무)
28	특수교육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채용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수행업무 : 교사의 감독 아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요구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문제행동 관리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학급)에서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29	특수예뮬케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돌봄교실 운영 계획 ○ 채용자격 :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 ○ 수행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및 보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 운영의 학생 보호 및 지도를 위해 채용한 직원
30	이중언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학교일자리창출방안,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을위한 이중언어교수요원위탁협약 및운영계획(초등교육정책과-15805) ○ 채용자격 : 대졸이상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능통자 ○ 수행업무 : 다문화가정학생 한국어 지도 및 다문화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강사
31	보육교실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 및 운영계획 ○ 채용자격 : 유초중등교사, 보육사, 학교장이 인정한자 ○ 수행업무 : 초등돌봄교실 운영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방과후교실 등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아침반, 저녁반 등)
32	전문상담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담당관-7994, 2011.12.29.) ○ 채용자격 :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관련 자격 소지자 ○ 수행업무 : 학교위기학생 상담, Wee 클래스 운영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과 Wee 클래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
33	학습부진학생전담강사		

직 중 설 명			
번호	직종명(비정규직)	직종별 관련내용	직종 설명
33	학습부진학생전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서울학생 기초학력보장 사업 계획 ○ 채용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 자격 기준 ○ 수행업무 :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공립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학습부진전담강사 지원비를 8개월간 지원함 - 학습부진전담강사는 초중등교육법 22조 1항에 의거 1년 미만의 강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복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함 - 학습부진전담강사는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학습부진학생지도와 학습부진학생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함
34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7조 ○ 채용자격 : 특수교육분야 전문 인력 ○ 수행업무 : 관련서비스 지원, 진단평가, 진로 직업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진단평가, 관련서비스지원, 방과후교육활동, 진로직업, 학부모 상담 등)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직원
35	특수교육지원 순회특수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의2 ○ 채용자격 : 유, 초, 중학교 특수교사자격소지자 ○ 수행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의 특수교육지원을 위해 채용한 특수교사
36	학교보안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격차해소과-891(2012.02.03) ○ 채용자격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 수행업무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를 위하여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직접 채용 관리함(국공립 초등학교 배치)
37	배움터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책임교육과-1428(2012.01.15) ○ 채용자격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 수행업무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를 위하여 학교에서 위촉하여 학교에 배치 봉사활동비 지급(사립초, 특수, 중, 고등학교 배치)
38	장애아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지자체 사업임 ○ 채용자격 : ○ 수행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으로 특수교육보조원과 다른 직원
39	커리어코치 (청소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2012주요업무계획 ○ 채용자격 : 진로관련 연수 50시간 이수자 ○ 수행업무 : 학생 진로지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학교 "청소년 커리어코치", 고등학교 "커리어 코치"
40	전임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 채용자격 : 경기도도자자격증 또는교원자격증 소지자 ○ 수행업무 : 학생선수전문실기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기관(학교)에서 지정종목 또는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직원
41	스포츠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기본법제22조(학교체육) ○ 채용자격 : 경기도도자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소지자 ○ 수행업무 : 초등교사체육수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사 체육수업 보조하는 강사
42	수련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 채용자격 :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교원자격증소지자 ○ 수행업무 : 학생수련교육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련활동을 하기 위하여 채용한 교육요원

직 중 설 명			
번호	직종명(비정규직)	직종별 관련내용	직종 설명
43	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학교급식법 제7조 ○ 채용자격 : 영양사 ○ 수행업무 :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채용한 직원
44	조리종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학교급식기본지침 ○ 채용자격 : 기준없음 ○ 수행업무 : 조리 및 세척 등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조리 등을 위해 채용한 조리사, 조리원
45	급식보조(배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학교급식기본지침 ○ 채용자격 : 기준없음 ○ 수행업무 : 배식 및 세척 등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업무 중 배식 등을 담당하는 직원
46	배식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학교급식법 제7조 ○ 채용자격 : 기준없음 ○ 수행업무 : 배식 및 청소 등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2학년 배식도우미(자치구 지원 +수익자+학교운영비)
47	순회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근거 : 교육감 결재 ○ 채용자격 : 보건교사유자격, 간호사면허 ○ 수행업무 : 보건교육 지원 및 보건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보건교사
48	인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없는학교인턴, 예술교육 인턴,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 기초학력미달인턴, 과학실험보조인턴, 특수교육지원인턴, 전문상담인턴, 산학협력인턴, 학교보건인턴